

# 2022년 건설근로자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결과

## 1 회의 개요

- 일시 : '22.5.27.(금) 14:00~16:00
- 장소 : 건설근로자공제회 15층 대강당
- 참석 : 위원장 및 위원 총 18인(불임1 참조)

## 2 논의 내용 및 결과

- '22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
  - '22년 논의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정책자문위원회 발제 주제(안) 논의
  - (위원 추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현장 전문가 위원으로 추천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추천자
1	서광학	(주)선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진실 위원
2	강병환	안택건설주식회사 본부장	
3	유재곤	대도펌프카 대표	

- 발제(논의)주제 추가 제안

연번	주제	추천자
1	건설근로자 교육 및 경력관리 국가시스템 추진	김진실 위원
2	건설근로자 잔업 추진	
3	근로자 교육제도 전면 개편 검토	
4	근로자 취업 준비교육 및 양성	
5	3D업종 및 공종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수입 추진	
6	근로자 건강검진 국가 통합관리 및 추진	
7	불법 집회 금지 방안	
8	취업플랫폼 이용 실태 파악	권혜자 위원
9	건설근로자 정규직화 유도 방안	안홍섭 위원

연번	주제	추천자
10	외국인 근로자 실태 및 취업경로 파악	박정재 부장 김두호 위원
11	건강진단 적용 대상 확대 검토	신익철 위원
12	기능등급제 활성화 방안 및 연계교육체계 구축	홍성준 위원
13	건설 분야 자격 체계 개편	송주현 실장
14	건설산업 차원의 건설인력 수급 현황	신영철 위원
15	취업플랫폼 사용자 현황 분석, 자격증 현실화 방안 등	이명래 위원
16	디지털화에 따른 건설업 인력수급 및 교육체계 개편 방안	나경연 위원
	교육훈련비 단가 인상 검토	
17	기후위기 및 환경 문제 관련 건설일자리 대안 방안	박귀천 위원
	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중대재해 사고 방지 방안	
	건설업 특성에 맞는 원·하청 협력 방안	

### 3 향후계획

- 2022년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6~7월)
- 위원 및 발제주제 추가 검토
  - 전문성 등 고려하여 위원 추가 검토
  - 내용의 적절성 및 발제자 섭외 가능 여부 등 판단하여 발제주제 추가 반영 검토

- 붙임 1. 2022년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참석자 명단
2. 2022년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사진
3. 2022년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록
4. 2021년 정책자문위원회 발제(논의)내용 추진 현황

○ **참석 : 위원장 및 위원 18인**

연번	소속 및 직위	성명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	송 문 현
1	前)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심 경 우(위원장)
2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 진 실
3	대한전문건설신문 기자	강 휘 호
4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교감	구 만 호
5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권 혜 자
6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장	김 두 호
7	그린건축기술사사무소 대표(기능장)	이 명 래
8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관리본부장	정 우 섭
9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팀장	홍 성 준
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나 경 연
11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 귀 천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계획부장	박정재(대참)
13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송주현(대참)
14	건설경제연구소장	신 영 철
15	군산대학교 교수	안 흥 섭
16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영전략본부장	신 익 철
17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	곽 윤 주
18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장	심 규 범

<사진1>



<사진2>



일 시	2022.05.27.(금) 14:00 ~ 16:00	장 소	공제회 15층 대강당
참석자	[붙임2] 참조		
회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보고</li> <li>· '22년 발제주제(안) 논의</li> </ul>		
심규범 위원 (간사)	( '22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위원장	· 운영계획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분 발언 바람		
김진실 위원	·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해본 결과 하나로 모아지는 의견들이 꽤 있었음.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근로자나 사업주 대표 등을 위원에 추가했으면 함		
위원장	· 현장 근로자의 참석이 어렵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이분들을 모셔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송주현 실장	· '21년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성과는 유의미했다고 생각됨. 다만, 분과별로 논의되었던 주제들이 그 후에 어떤 식으로 추진되었고 정책제언이 되었는지 공유해주기 바람. '22년도에도 주제들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함		
심규범 간사	· '21년에 논의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정리해서 공유하겠음		
신영철 위원	·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공제회 사업 추진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궁금함. 특히, 적정임금제의 경우엔 일자리위원회에서도 '23년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 송옥주 의원이 관련 법령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인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심규범 위원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상태며, 노동계나 협회와 긴밀히 협업하여 현황 파악 및 추진에 노력하고 있음. 기능등급제 관련해서는 등급제 출범 이후 등급분포 변화라던가, 경기도 시범사업 추진 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정리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해보겠음</li> <li>· ('22년 발제주제(안) 설명)</li> </ul>		
위원장	· 운영계획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분 발언 바람		
권혜자 위원	· 근로자 취업경로 파악은 좋은 주제라고 생각됨. 이 내용을 건설 근로자가 노동 플랫폼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또한 건설근로자 취업경로나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같이 연결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유·무료 직업소개소 등이 대체로 이 군소 노동플랫폼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 초대형 플랫폼들이 문어발식으로		

	<p>모든 직종을 다 포괄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건설근로자 취업경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봐야할 것이라고 생각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크메이트 등 취업플랫폼 등이 임금 체불 가능성이 없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데 실태 파악 등이 필요함</li> </ul>
<b>안홍섭 위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은 사실상 플랫폼 이외에 현장에서 협력업체들이 반장을 통해 고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임. 면담 등 샘플링을 해서 조사하면 실질적인 경로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 제안함</li> <li>· 제안된 주제들이 단기·중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건설근로자의 정규직화 유도 방안도 검토가 필요</li> </ul>
<b>박정재 부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근로자 취업 경로 파악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 특히, 지금 건설현장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임. 불법외국인 문제도 심각한데,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안전사고 또한 빈번하게 일어남.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취업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li> <li>· 퇴직공제제도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이 되는지도 알고 싶음</li> </ul>
<b>김두호 위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젊은층 유입을 위한 제도가 부족함. 청년 인턴 지원금 같은 제도도 생산이나 제조업에만 적용됨. 건설현장은 젊은 층이 계속 줄어들고 외국인이 대부분임. 생산 및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에도 병역 특례가 적용되어야 함</li> <li>· 내국인이 오히려 소외되는 역전현상도 일어나고 있음. 내외국인의 임금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 계절적 외국인 수요도 존재하는데, 공사현장이 줄어드는 동절기에 농촌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음. 광범위하긴 하지만 이러한 실태조사 또한 필요하다고 여겨짐</li> </ul>
<b>신익철 위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좀 전에 질의하신 외국인 근로자 퇴직공제 적용 여부에 관련하여, 현재 행정해석 상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해당 현장에 노동을 제공했다면 퇴직공제 대상으로 보고 있음</li> <li>· 근로복지분과에 제안된 주제 중 ‘건설기계 노동자 건강진단 적용 방안’과 관련하여, 적용 대상을 기계노동자에 국한하지 말고(건설 노동자가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전체 건설근로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됨</li> </ul>
<b>홍성준 위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 훈련체계 구축’과 ‘기능등급제 시범사업 성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은 별개가 아닌 하나의 주제라고 보여 짐. 등급제 연계교육 이전에 사실 활용 방안이 먼저 나와야 함. 활용 방안이 나와야 이에 맞게 교육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논의될 수 있으므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있음. 따라서 이 두 주제에 대해 별도로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연관시켜 하나의 심도있는 주제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됨</li> <li>· 결론은 선결과제는 활용방안 마련이며, 법제화가 되어야 할 것임. 올해 공제회 핵심 과제가 이 기능등급제의 활성화라고 생각됨. 등급제가 활성화 되어야만 건설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사회가 될 것 이라고 생각함</li> </ul>

<p><b>심규범 위원</b> (간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급제 활성화 등 관련된 논의들은 작년에 직업능력연구원과 조사연구센터, 기능등급관리팀이 공동으로 연구한 것이 있는데, 해당 보고서에 기본적인 활용방안들이 열거되어 있음. 이것에 대해 국토부 및 관련 유관 기관들을 통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가고 있음. 그리고 경기도 시범사업 또한 진행중에 있음</li> </ul>
<p><b>송주현 실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은 타 산업과 입직과정에 차이가 큼. 사실 이주 노동자 쿼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훨씬 많음에도 건설업에서 문제점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입직과정의 차이 때문임. 단기성 근로가 많기 때문에 노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li> <li>· 따라서 취업경로 기술 이전에 타 산업과 다른 건설업 입직과정 시스템 구조 및 파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됨</li> <li>· 퇴직공제 납부 개선 방안에는 요율 인상 부분이 포함되어야 함</li> <li>· 기능등급제 등급 산정에는 근속, 자격증, 포상,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는데 자격증의 현장성이 떨어짐. 현실에 맞는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li> </ul>
<p><b>심규범 위원</b> (간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 분야 자격 체계 개편은 세미나 주제로도 적합할 것으로 생각됨</li> <li>· 건강진단 관련해서는 건설 기계 노동자와 건설 노동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제안해보겠음</li> <li>· 취업경로 관련하여, 외국인 문제도 과제 속에 포함되도록 제안하겠음</li> <li>· 또한, 청년지원금 및 병역특례 등의 내용도 포함해서 다루겠음</li> <li>· 취업플랫폼은 현재 여러 가지 앱 대표와 면담 중인데 워크스메이트도 포함시켜 고용 개선과 연결시킬 수 있는 장점 등에 대해 점검해 보도록 요청하겠음</li> <li>· 기능등급제 관련 연계 교육은 이 자리에 나경연 위원이 발제 자료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라며, 퇴직공제 납부 개선 중 요율 관련 내용은 김명수 교수 발제 내용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선행 연구자인 나경연 위원이 별도로 할지 조정해 보겠음</li> </ul>
<p><b>신영철 위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된 주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므로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함</li> <li>· 공제회 주요 사업 중 훈련과 취업이 있음. 이 둘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삼았으면 함</li> <li>· 두 번째는, 불법 외국인이 많을수록 공제부금 누락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불법외국인 고용에 대해 현황 파악 및 근절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봄</li> <li>· 마지막으로 건설산업 차원에서의 일자리 수요 공급 추이 파악을 제안함</li> <li>· 추가로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해주실 것을 요청함</li> </ul>
<p><b>이명래 위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근로자의 정규직화나 젊은 층의 현장 유도 방안 같은 넓은 의미의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li> <li>· 젊은 층에 현장 진입을 하지 않는 이유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li> </ul>

	<p>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의 현실화 방안 필요</li> <li>· 주50시간 노동시간 실태 파악은 현장 특성상 굉장히 어려운 조사가 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노동강도에 대한 실태 파악도 중요함</li> <li>· 취업플랫폼은 그 사용자가 현장 근로자인지, 이직자인 지 등 확인이 필요함</li> <li>·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취업이므로 이를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됨</li> </ul>
김진실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정부 국정과제 중 ‘직무능력 은행제’라는 것이 있는데 기능등급제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선도 중이라고 생각됨. 향후에는 시스템상 연계하여 국가 차원에서 모든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 검토가 필요해 보임</li> <li>· 건설업의 국가자격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음</li> <li>· 현장에서는 기능등급제가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현장 문제를 상당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특히 임금과 숙련도가 연계되어 있는데 숙련도에 대한 입증 방법이 없던 문제 해결에 대해 기대감이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사업주 처벌 뿐 만 아니라, 개인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규정 준수 등 책임성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였음</li> <li>· 여러 가지 문제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장 기능공(숙련공) 부족 문제</li> <li>2. 기능공의 능력 및 기술수준에 대한 사전 측정(인정) 기준 부재로 인한 임금 상승 문제</li> <li>3. 근로자 단기 채용 시 지병이 있어도 개인정보 사전 파악이 어려워 작업 중 산재요청 시 사실규명 어려움 문제</li> <li>4. 안전규정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필요 (현장에서 많은 안전교육을 반복하고 있으나, 개인이 안전규정과 기준을 위반하여 사고 또는 재해로 이어는 경우에는 penalty제도 도입이 필요)</li> <li>5. 근로자 채용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각 지방 산업보건센터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동할 때 마다 건강검진을 반복해야 하는 모순이 있어 개선이 요구(업체별 비용 절감과, x-ray 활용 노출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방안 마련 필요)</li> </ol> </li> </ul>
나경연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몇 가지 공감되는 내용에 대해 말하고자 함. 등급제 관련하여 교육 훈련이 활용방안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며, 관련 내용이 국토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퇴직공제부금 요율 또한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음</li> <li>· 건설인력의 수급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스마트 디지털화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봄. 자동차 산업은 디지털화로 교육과정 개편까지 그 후폭풍이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건설업도</li> </ul>



	<p>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 이러한 개혁이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장기 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비 단가 인상도 추진되어야 함. 기능인 교육 단가가 기술인 교육 단가보다 낮는데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임</li> </ul>
박귀천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환경 문제가 건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 마련 연구가 필요</li> <li>·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li> </ul>
박정재 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시행 초기단계로 현장에서 혼란이 많은 것이 사실임.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안임</li> </ul>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복지를 논하면서 안전문제가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됨. 공제회에서 퇴직공제부금 관련된 업무만 하기에는 건설근로자들이 처한 환경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할 부분이 많다고 여겨짐.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li> </ul>
안홍섭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처벌법은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안전이라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협력업체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임. 점진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가면 그 영향이 선순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함</li> <li>· 등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정 반영이 가장 효과적일 것임. 신인도 평가 항목 등에 반영을 하면 반드시 활성화 될 것임</li> <li>· 최근 현장에 여성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관점을 달리하면 해외 근로자 유입을 줄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여성근로자의 유입 촉진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임</li> </ul>
이명래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산업이 타 산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li> </ul>
구만호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취업시켜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젊은 층이 현장 진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건설현장의 근로조건이 아직도 열악한 것이 그 이유임. 주휴수당 등이 그 예임. 젊은 층을 유입하려면 타 산업과 다른 메리트가 있어야 함. 병역특례 같은 군 문제 해결이 메리트가 될 수 있음</li> <li>· 또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화 되어 월급제 및 4대보험 적용 등이 보장되어야 젊은 층 유입이 촉진될 것임</li> </ul>
송주현 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급제는 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요구하여 추진된 제도임</li> </ul>
곽윤주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카드제는 '20년도에 도입 이후 현재 약 1,500여개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음. 현재 근로자 대상으로 카드 발급을 확대하는 것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 중임. 다만, 현장 단말기 설치 등에 강제 조항이 없어 아직 정착단계임. 올해 7월부터 대상 공사가 확대되고 '24년도에는 퇴직공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됨. 최근에 국토부에서 임금 직불제와 연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li> </ul>

박귀천 위원	· 전자카드제 시행의 효과 등에 대한 보고서가 부족한 것 같음
안홍섭 위원	· 전자카드제가 모든 현장에서 시행이 되려면 설계내역에 반영이 되어야 함
곽윤주 위원	· 전자카드제 발전 방안 연구 중에 있음. 제도 추진 현황이나 문제점 등 분석하여 주제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 의미있는 논의였다고 자평함. 주제의 범위가 다소 넓어지는 것은 자문회의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됨. 연구 주제를 선정하거나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 보임</li> <li>· 기능등급제와 전자카드제를 잘 정착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보여짐</li> </ul>
심규범 위원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해 주신 과제들과 관련해서는 발제자 섭외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반영하겠음</li> <li>· 퇴직급여제도의 1년 미만 근로자 적용 확대와 관련하여 퇴직공제 제도도 부금인상과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대응책 마련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li> <li>· 자격체계와 관련해서는, 산업인력공단은 전 산업을 포괄해야 하므로 건설업의 세세한 특성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이러한 것을 보완하고자 출범한 것이 건설인자위인데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므로 공제회라도 나서서 이 역할을 대신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함</li> </ul>
위원장	· 모두 수고 많으셨음. 다음 전체회의에서도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 드림. 이상 회의를 마치겠음

연 번	구분		발제 주제	추진 현황
1	고용개선 분과위원회	1차 (서면)	·경험학습인증제도의 소개 및 건설 기능등급제에 주는 시사점(김안국 연구위원)	관련 ‘이슈페이퍼’ 작성 시 참조
2			·건설기능인력 ‘시공경험’의 중요성과 ‘기능인등급제’를 통한 활용방안 모 색(심규범 센터장)	‘이슈보고서’ 제작. 홈페이지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
3		2차	·건설근로자 비대면 직업훈련 적 용에 대한 검토(주인중 선임연구 위원)	기능 향상 교육 과정 마련 시 참조
4			·건설 관련 특성화고의 현장연계 교육훈련방안 모색(심규범 센터장)	‘이슈보고서’ 제작. 홈페이지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
5	근로복지 분과위원회	1차	·여성 건설근로자 취업현황과 정 책 방안(김경희 선임연구위원)	기능 향상 교육 과정 마련 시 참조
6			·건설업 배치전 건강진단 개선방안(김 영기 교수)	-
7		2차 (서면)	·건설근로자 고용복지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방향 제언(임소람 수석연구원)	서울시 건설고용개선 자문 시 활용
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효과 분석(강 승복 차장)	‘이슈페이퍼’ 제작. 홈페이지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
9	공개세미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출범 성과 보 고(임화진 팀장)	경기도 현장 시범 사업 실시예 반영
10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취지 및 추진방향(심규범 센터장)	SH 등 자문 시 활용 및 홍보